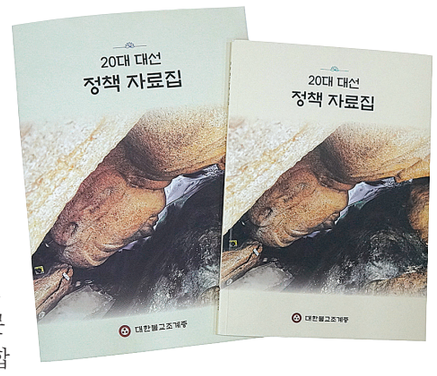
전통문화 현안, 대통령 3명 거쳐도 답보상태

조계종, 20대 대선 정책자료집 발간

18 · 19대 양대선 정책 되풀이
단일 사업 · 법안 일부만 변화
공원 · 문화재 · 전통사찰 관련
법 · 제도 개선 · 조직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안 마련 요구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최근 발간한 '20대 대선 정책자료집'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 현안에 대해 불교계가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 개선 방안들이 담겼다. 그러나 상당수가 제18대 · 19대 대선 당시 불교계가 제안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불교계는 일관된 기조로 해결과 개선을 요구해 왔고 상당수가 공약으로 반영됐지만,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제작된 '20대 대선 정책자료집'은 크게 △국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유산 △국민과 함께하는 자연문화공원 △국민과 함께하는 평등세상 △남북이 함께하는 불교문화교류 △불교계 현안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통문화유산 항목으로, 문화재청 조직정비를 통한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 강화, 비지정 사지 및 소재문화재 관리 일원화,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 문화재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으로 분류됐다. 대부분이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사안들이다.

조계종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불교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전승,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적합한 예산배정과 통합적인 지원은 물론, 전통사찰 발전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하는 법령과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불교문화유산본부 설립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46.3%에 달하는 불교문화재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랜세월 사찰이 관리하며 직접 보존 · 전승해 온 불교문화재의 특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유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다.

이같은 제안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문화재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2년 18대,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18대 박근혜 前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사찰 문화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공약화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종합적인 보존 ·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불교계는 다시 20대 대선 정책으로 같은 내용에 대한 제안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조계종은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성보의 무주물 간주 문제, 문화재보호법 도난시 공소시효 연장,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9건의 규제법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역시 2017년 대선 당시 정책제안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불교계는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와 전통사찰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법령의 독소조항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사찰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 가운데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일부만 개선됐다.

국립공원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 및 가치 평가 등 공원정책도 십수년째 반복되는 공약이다. 이는 전통사찰이 국립공원에 강제편입됨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방안,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간 불교문화교류 등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제안을 반영한 수많은 공약(公約)들이, 그 필요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불심을 잡기 위한 공약(空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대선때마다 불교정책을 제안하고 공약화되지만 이행률이 저조한 까닭에 매번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며 "각 정부가 불교계에 내걸었던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꼭 필요한 정책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병두 前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도 "전통문화 관련 현안이나 정책제안은 비단 불교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며 "특히 불교문화유산은 사찰 내 건축물과 성보뿐 아니라 전통의식, 주변환경 등과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지는데다가 스님들의 수행 · 거주지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계가 개별사안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 함께하는 사찰일구기' 발간

불교사회연구소, 8개 사찰 분석
사찰의 현장 기반한 연구보고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찰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찰의 역할과 과제 등의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2021년 12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 일구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불교사회연구소가 2020년부터 진행한 '미래사회 공동체 연구'의 결과물이다. 지역사회 소멸과 지역사찰의 존립위기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왜 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하는지, 지역활동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가 책임집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이란 스님, 신도, 전문가,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주체로 참여해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 역사, 환경 및 삶의 문화, 나아가 시대적 · 사회적 요구를 사찰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담아내고 실천하는 사찰을 말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도심과 군 단위에 소재하는 8개 사례사찰 활동을 자세히 관찰, 사례를 분석했다. △실상사 산내공동체 △낙산사 불자마을 △구례 화엄사 농민회와 함께 일구는 통일쌀공동경작단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미황사 문화프로그램 △사무량심회를 중심으로 한 부산 대광명사 △지역을 실천현장으로 지역일꾼 성장을 목표로 활동한 시흥 대각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주 선덕사 △서울 마포 성림사 주지 스님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사례 등 감동적이고 다양한 현장 모습이 생생하게 정리됐다.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의 공동체성 함양이다. 특히 사찰과 지역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스님과 신도 등 사찰의 핵심인력이 철학과 활동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지역활동 실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정보와 자료 제공 △지역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전법 · 포교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지역 중심 변화 등을 제언하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코로나19와 메타버스 등장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역사회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재확인한 연구"라며 "사람이 살고 있기에 붓다가 살아야 할 곳이기에 지역사회 공동체는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02)730-0883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사 불교용품거리, 서울 미래유산 지정

서울시 23개 미래유산 선정
"테마거리 가치 커" 평가돼



서울 조계사 인근 불교용품거리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종로 견지동 조계사. 조계사 일주문 양쪽 보도로는 불교용품점들이 줄지어 서 있어 마치 '불교용품 테마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조계사 견지동 인근 불교용품 거리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021 서울 미래유산'으로 '견지동 불교용품 거리'를 비롯해 총 23개의 유 · 무형 자산을 선정 · 발표했다.

선정된 '견지동 불교용품 거리'는 1970년대부터 조계사로 일주문 양옆에 불교용품 전문 판매점들이 모여 조성된 거리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이다. 서울시는 "불교용품 테마거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발굴과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 전문가 등이 제안한 선정대상 후보를 접수해 사실 검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및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보존의지를 확인하는 동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2021년에는 총 96건이 신규 제안됐으며, 연구진의 기초심의를 거친 68건이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29건의 후보로 선정됐고, 그 중 소유자가 동의한 23건을 최종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미래유산 인증서 및 동판 형태의 표식을 교부하고, 수리비 지원이나 맞춤형 홍보물 제작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제18차 세계불교여성대회 한국서 열린다

구랍 29일 제17차 대회 폐막서
본각 스님 수락…2023년 개최

세계 여성불자들이 모여 현대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계불교여성대회가 2023년 한국에서 열린다.

제17차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가 구랍 27일부터 29일까지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세계불교여성대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됐으며, 29일 폐막식에서는 차기 제18차 대회의 한국 개최가 공식 발표됐다. 세계불교여성대회 한국 개최는 지난 2004년 제8차 대회를 중앙승가대에서 개최한 이래 19년 만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수락 연설을 통해 차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 2004년 제8차 대회를 중앙승가대에서 개최한 이래 다시 한번 2023년 제18차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대회에 여러분을 맞이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더 나아가 전 세계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 불자님들의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과 샤카디타코리아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는 1987년 설립된 세계 최대 불교 여성 단체로 샤카디타는 '붓다의 딸'이라는 뜻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여성 불자들의 국제 교류를 증진하고 학문적 연구 등을 통해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한국지부는 2013년 설립됐으며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과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 종식을 발원하며 임인년 새해 희망을 전합니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TEL 1670-2010